

2016. 12. 09 10:00

제248회 달성군의회(정례회)  
제 12 차 본회의

#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임동화 · 나상권

#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2월 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책사업과)

### 3. 제안이유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4. 주요내용

- (재)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 260백만원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 260백만원
  -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달성군 출연금 260백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
  -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재발굴, 양성

### 5. 출연 심의요구서

###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li> <li>○ 대 표 : 김 문 오</li> <li>○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li> <li>○ 기본재산 : 8,564백만원</li> </ul>																											
출 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 예정금액 : 260백만원(군비)</li> <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16년 정리추경</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 <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head> <tbody> <tr> <td>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td><td>'16년</td><td>260 (기출연5억)</td><td>260</td><td>-</td><td>-</td><td>260</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정리추경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16년	260 (기출연5억)	260	-	-	260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정리추경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16년	260 (기출연5억)	260	-	-	260																						
출 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li> <li>○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장학기금이 부족하여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예상됨.</li> </ul> <p>※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p>																											
근 거 법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li> <li>○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li> <li>○ 지방재정법</li> <li>○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li> </ul>																											
사업부서 의 견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자, 전국 최고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li> </ul>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SNS등을 활용한 홍보 수단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노력 필요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 260백만원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 260백만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함.

##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출연액	2016년 예산액(최종)	비 고
총 계		1,010	760 (기출연 500)	
기관운영비		해당	없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1,010	760 (기출연 500)	

#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장학재단			전화번호	053-668-3274		
				홈페이지	없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0년 설립허가년월일 : 2000.04.04 법인성립년월일 : 2000.04.26						
임원 (15.9.1 현 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	달성군수(당연직)			2010.07.0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이○○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당연직)			2016.09.0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황○○	농협달성군지부장(당연직)			2016.03.07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김○○	자동차보험업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김○○	자연보호달성군협의회회장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신○○	자영업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김○○	가창새마을금고이사장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이○○	달성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박○○	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서○○	前 달성군의원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곽○○	前 유가농협장			2016.08.22~2020.08.21	
	비상임이사	박○○	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정○○	前 시의원			2011.06.21~2019.06.20	
	비상임감사	채○○	前 현풍고 행정실장			2013.06.21~2017.06.20	
	비상임감사	신○○	달성군 회계과장(당연직)			2016.07.01~재임기간	
주요기능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재무현황 2015.12.31 기준	자산	8,221백만원
	예산액	954백만원	912백만원	930백만원		부채	-
	지자체 지원액	500백만원	1,010백만원	500백만원		자본	8,221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II. 검토의견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재)달성장학재단은 2000년 4월에 법인 설립되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면학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재)달성 장학재단 정관 제4조  
(사업) 제2항에 규정
  -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  
사업 경비를 조달함.
  
- (재)달성장학재단 출연연금 변경계획안의 사유는  
달성군 세입금고인 농협에서 출연금 2억 5천만원과  
대구은행에서 출연금 1천만원으로 합계 2억 6천만원이 추가로  
출연되면 2016년도 최종 출연금은 기출연금 5억원을 합해 최종  
7억 6천만원이 출연됩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기존 적립금과 함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달성장학재단 정관에 따라 장학금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경비를 조달함에 있어 기본재산의 증자를 위한  
출연금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안 자 : 달성군수

### 2. 제안이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추진중인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 4. 예산총괄

####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총 계	684,600	664,600	20,000
일 반 회 계	669,000	649,000	20,000
특 별 회 계	15,600	15,600	0
의료급여기금	585	585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7,516	7,516	0
기반시설	112	112	0
치수사업	7,132	7,132	0
농공지구관리	255	255	0



##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84,600	664,600	20,000	3.01
일반회계	계	669,000	649,000	20,000	3.08
	지방세수입	123,862	123,862	0	0.00
	세외수입	28,422	29,916	△1,494	△4.99
	경상적세외수입	19,485	19,485	0	0.00
	임시적세외수입	8,937	10,431	△1,494	△14.32
	지방교부세	133,593	116,835	16,758	14.34
	조정교부금등	38,096	37,095	1,001	2.70
	보조금	189,762	186,027	3,735	2.01
	국고보조금등	127,367	124,705	2,662	2.13
	시·도비보조금등	62,395	61,322	1,073	1.7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5,265	155,265	0	0.00
특별회계	계	15,600	15,600	0	0.00
	세외수입	342	342	0	0.00
	경상적세외수입	320	32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22	22	0	0.00
	보조금	400	400	0	0.00
	국고보조금등	320	320	0	0.00
	시·도비보조금등	80	8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858	14,858	0	0.00

### 3) 회계별 세출총괄

####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84,600	664,600	20,000	3.01
일반회계	계	669,000	649,000	20,000	3.08
	일반공공행정	49,233	49,219	14	0.03
	공공질서및안전	7,814	8,782	△968	△11.02
	교육	7,953	7,693	260	3.38
	문화및관광	62,258	62,256	2	0.00
	환경보호	12,353	12,383	△30	△0.24
	사회복지	168,356	164,320	4,036	2.46
	보건	13,638	12,175	1,463	12.02
	농림해양수산	42,852	42,551	301	0.71
	산업·중소기업	2,762	2,762	0	0.00
	수송및교통	131,020	130,382	638	0.49
	국토및지역개발	66,806	64,822	1,984	3.06
	예비비	30,268	18,084	12,184	67.38
	기타	73,687	73,571	116	0.16
특별회계	계	15,600	15,600	0	0.00
	환경보호	7,516	7,516	0	0.00
	사회복지	401	400	1	0.28
	국토및지역개발	7,217	7,217	0	0.00
	기타	466	467	△1	△0.24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84,600	664,600	20,000	3.01
일 반 회 계	계	669,000	649,000	20,000	3.08
	인건비	60,276	60,229	47	0.08
	물건비	32,363	32,331	32	0.10
	경상이전	237,159	231,986	5,173	2.23
	자본지출	301,039	298,527	2,512	0.84
	시설비및부대비	274,196	271,599	2,597	0.96
	민간자본이전	17,614	17,701	△87	△0.4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91	2,291	0	0.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118	1,118	0	0.00
	자산취득비	5,820	5,818	2	0.04
	융자및출자	10	10	0	0.00
	내부거래	1,200	1,200	0	0.00
	예비비및기타	36,953	24,717	12,236	49.50
	예비비	30,268	18,083	12,185	67.38
	반환금기타	6,685	6,634	51	0.77
특 별 회 계	계	15,600	15,600	0	0.00
	인건비	347	346	1	0.32
	물건비	42	212	△170	△80.28
	경상이전	335	335	0	0.00
	자본지출	1,507	1,623	△116	△7.15
	시설비및부대비	1,507	1,623	△116	△7.15
	예비비및기타	13,369	13,084	285	2.18
	예비비	6,179	5,893	286	4.85
	반환금기타	7,190	7,191	△1	△0.02

#### 4)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기 정 액	조 정 액	비 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증축(가천리)	49,500	△49,500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사업중단
농업정책과	시니어 친환경 협업농장 조성	72,000	△72,000	4차에 걸쳐 접수결과 사업 참여자 없어 사업 중단
	피해보전직불	0	77,653	시설원예작물(포도 등) 농가에 대한 FTA피해보전금
	폐업지원	0	452,667	폐업하는 시설원예작물(포도 등) 농가에 대한 지원
건 설 과	화원설화리(한빛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58,704	30,000	사업비 부족분
	가창정대~옥포반송간 도로개설	70,000	△70,000	사업 보류
	가창주2리~대일2리마을 간 도로정비	0	700,000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안전방재과	다사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	1,355,975	△911,000	국시비 변경 내시
	다사 서재2 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992,800	△58,000	시비 변경 내시
	단산1·청룡골1 세천 소 규모 공공시설 정비	0	600,000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문옥교 교량 설치공사	0	1,000,000	신규 사업
	성산1천 세천 소규모 공 공시설 정비공사	0	350,000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0	30,000	운영비 부족분
	둘레길 정비	993,700	50,000	사업비 부족분
정책사업과	달성장학재단 운영	500,000	260,000	군금고 협력사업비 (농협 2억 5천, 대구은행 1천)
건강증진과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증축	0	1,000,000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하빈.현풍	환경미화원 보수	198,856	30,108	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구 지 면	정규직 보수	198,492	33,034	정규직 인건비 부족분

## 5. 2015년도 이월사업

### □ 명시이월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279	224,141	159,019	
일반·특별회계	279	224,141	159,019	
기획감사실	1	150	143	- 공사기간 미도래
회계과	2	7,167	251	- 공사기간 미도래
정보통신과	1	351	351	- 행자부 개발시스템 개발지연
사회복지과	5	2,613	2,296	- 국시비 교부지연 - 공사기간 미도래
농업정책과	2	185	185	- 건축허가 및 개불행위 지연 - 공급체계 미결정으로 보류
청소위생과	4	5,745	525	- 12월 대행처리후 다음달 지출건
건 설 과	133	100,309	71,077	- 보상협의 지연 - 공사기간 미도래, -공사비 부족
도 시 과	36	6,295	3,302	- 공사기간 미도래, - 보상협의 지연,
안전방재과 (치수사업)	34	30,350	24,749	- 실시설계 용역후 발주 - 공사기간 미도래
건 축 과	6	3,157	728	- 공사기간 미도래 - 대구시, 관련부서와 협의지연
교 통 과	7	5,495	3,290	- 공사기간 미도래 - 한전지중화 공사비 부담 미정산
공원녹지과	21	17,567	11,163	- 공사기간 미도래 - 현장여건 감안 공사변경
정책사업과	10	26,914	24,933	- 공사기간 미도래 -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중
경 제 과	4	1,811	445	- 시장상인회와 사업내용 협의지연 -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문화체육과	8	12,832	12,771	- 준공시기 미도래 - 보상협의 지연
관 광 과	2	600	265	- 용역기간 미도래 - 공사기간 미도래
보 건 과	2	1,600	1,545	- 설계용역기간 미도래 - 병원에서 접종후 비용청구지연
건강증진과	1	1,000	1,000	- 증축관련 계획 자료수집 지연

## 6. 주요내용

### □ 예산규모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46억원보다 200억원(증 3.01%)이 증가된 6,846억원으로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90억원 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6,690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억원과 증감 없이 동일합니다.
- 일반회계 중 예비비는 302억 6천 8백만원 입니다.

###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과 증감 없이 동일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 9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167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정교부금등은  
10억 1백만원이 증액된 380억 9천 6백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에 있어서는  
37억 3천 5백여원이 증액된 1,897억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6,6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주요 자체사업 증액사업으로는

- 장애인복지관 방수공사 2천 2백만원
- 화원 설화리(한빛아파트옆)도시계획도로 개설 3천만원
- 문옥교 교량설치공사 10억원
- 둘레길 정비 5천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2천 2백만원
- 시니어 친환경 협업농장(비닐하우스) 조성 7천 2백만원
- 가창정대~옥포반송간 도로개설 7천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 가창 주2리~대일2리 마을간 도로정비 7억원
- 단산1·청룡골1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공사 6억원
- 성산1천 세천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증축 10억원 계상하였으며

○ 주요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억 5천여만원
- 장애인주거시설 운영비 5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5천 1백만원
- 보육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2천 3백만원
-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5천 2백만원
- 폐업지원금 4억 5천 2백만원
-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1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상금 1억 7천 3백만원
- 다사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 9억 1천 1백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4억 4천 6백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액금액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총액단위 변동 없으며 국고보조에 3천원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이 88만 7천원 증액과  
시보조조금 22만 1천원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110만 8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

예산총액과 세입예산에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취소된 사업과 용역등에 대해 감액하고 감액된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 ■ 종합검토의견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와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인건비나 법정경비의 부족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 200억원 증액편성 계획으로 세입예산의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167억, 조정교부금 10억, 보조금 3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원 규모로 감액조정되고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40억, 보건분야에 14억 국토및지역개발에 20억원규모로 반영되었으며 차액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121억원 규모로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정확한 재원을 판단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시장경제에서 경기변동을 예측하여 재정 판단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 167억원 규모의 자금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세입에 반영되고 예비비가 121억원 규모로 증액 반영되는 부분은 최선의 방법을 다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대상사업 279건의 총예산액 2,241억 4천만원중  
집행액 638억 8천 7백만원과  
불용액 12억 4천 6백만원을 제외한  
1,590억 1천 9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의 예산대비 70.9%가 집행되지 못하고  
전년도의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며, 연도내에 집행가능액만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 과다발생에 대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체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8일

2. 제 출 자 : 구자학 의원(대표발의)

#### 3.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 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6조)

- 지방의회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 지방의회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지방의회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위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9조)

다.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를 제한하고, 예외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16. 9. 27)됨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일부 조항을 「청탁금지법」등 관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조례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적용에 있어 공직사회 내부 뿐 아니라 일반인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등을 제시한 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상 정립 및 주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의의원 : 구자학 의원, 하중환 의원

## 1.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6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9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안 제22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조, 제3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9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를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4조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 중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3, 4 및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4]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9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회피직무	[ ] 의안심사 [ ] 예산심의 [ ] 행정감사조사등 [ ] 기타 [ ] 회의				
회피원인	[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주소			

### 신 고 사 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금품등 관리대장

[illegible]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불임 1 또는 불임 2 서류 첨부

##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 가.~ 나.(생략)</p> <p>2. “<u>선물</u>”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u>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u>을 말한다.</p> <p>3. “<u>향응</u>”이란 <u>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u>하는 것을 말한다.</p> <p><b>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b></p> <p>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u>금품등</u>”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u></p> <p>2. <u>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u></p>	<p><b>제2조(정의)</b> ----- -----.</p> <p>1. (현행과 같음) 가.~ 나.(현행과 같음)</p> <p>2. “<u>금품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u>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u></p> <p>나. <u>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u></p> <p>다. <u>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u></p> <p><u>&lt;삭 제&gt;</u></p> <p><b>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b>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u>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u></p> <p><u>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u></p> <p><u>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계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u></p> <p><u>5. 이벤트 등에서 추천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u></p> <p><u>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u>③ 제19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u></p> <p><u>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u></p> <p><u>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u></p> <p><u>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u></p> <p><u>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u></p> <p><u>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u></p> <p><u>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u></p> <p><u>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u></p>
---	--

	<p>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17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b> 의원은 군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p>	<p>&lt;삭 제&gt;</p>
<p><b>제18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b>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18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b> ----- ----- ----- ----- ----- -----별지 제4호 서식----- -----.</p>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

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 서식-----

-----

####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

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p>제20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1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p>	<p>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p> <p>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p> <p>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0조(영리행위의 신고)----- ----- ----- -----별지 제9호 서식 -----.</p> <p>제21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 -----직무관련자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p>
--	--

<p>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금융기관</u>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u>별지 제7호 서식</u>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22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b>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li> <li>2. 군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li> <li>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li> <li>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li> </ol> <p>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p> <p>-----</p> <p>-----</p> <p>-----<u>금융회사등</u>-----</p> <p>-----</p> <p>-----.</p> <p>② -----</p> <p>-----</p> <p>-----</p> <p>-----</p> <p>-----<u>별지 제10호 서식</u>-----.</p> <p><b>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b>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li> <li>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li> <li>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li> <li>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li> </ol>
---	--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  
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  
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  
련 금품 등인 경우

####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제2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  
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  
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  
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  
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붙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  
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  
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  
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

####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11호 서식-----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  
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  
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  
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p><u>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u></p> <p><u>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 경위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b>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의원에 대한 강령의 교육·상담</b></p>	<p><u>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u></p> <p><u>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u></p> <p><u>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u>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u></p> <p><u>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u></p> <p><u>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u></p> <p><u>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b>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b></p>
---	--

<p>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u>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u> 관장한다.</p> <p><u>제39조(준용)</u>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제2항의 “<u>통상적인 관례의 범위</u>” 사항은 <u>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u></p>	<p>-----  -----<u>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u>-----  -----.</p> <p><u>&lt;삭 제&gt;</u></p>
--	--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 범위 등)

-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 ② 삭제 <2016.9.27.>
-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8일
2. 제 출 자 : 구자학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달성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노인복지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폐지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9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기금 보유액이 5억5천3백만원으로써,
-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수익성 악화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구자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의의원 : 구자학 의원, 하중환 의원

## 1. 제안이유

- 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달성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노인복지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1항, 부칙 제7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 2017.1.1.] 제4조제1항 단서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칙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8일
2. 제 출 자 : 구자학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본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금은 달성군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폐지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 및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3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기금 보유액이 5억5천9백만원으로써,
-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수익성 악화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구자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의의원 : 구자학 의원, 하중환 의원

## 1. 제안이유

- 본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금은 달성군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1항, 부칙 제7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 2017.1.1.] 제4조제1항 단서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칙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8일

2. 제 출 자 : 채명지 의원(대표발의)

#### 3. 제정이유

-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 가.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근거마련(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안 제6조 ~ 안 제7조)
- 라.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및 홍보(안 제8조 ~ 안 제9조)

#### 5.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47조의2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최근 생활양상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응급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군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매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관내 학생 등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신속한 응급처치가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뇌출혈 등에 의한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 군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명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의의원 : 채명지 의원, 김상영 의원

## 1. 제안이유

-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결과를 다음연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근거마련(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안 제6조 ~ 안 제7조)
- 라.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및 홍보(안 제8조 ~ 안 제9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47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도록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그에 필요한 경비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달성군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 포함) 다중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그 교육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군수는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8일
2. 제 출 자 : 엄윤탁 의원(대표발의)
3. 제정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 가.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의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나.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안 제6조~제7조)
- 다.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제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의 조정, 특정장비 사용제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마.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5.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 제16조, 제21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군수,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 안 제6조, 안 제7조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제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의 조정, 특정장비사용 제한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도점검, 소음저감 개선명령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 제21조 및 제16조에 따라 모든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절히 규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엄윤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의의원 : 엄윤탁 의원, 김성택 의원

## 1. 제안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의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나.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안 제6조~제7조)
- 다.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제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의 조정, 특정장비 사용제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마.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13조, 제16조, 제47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발생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의 정서적 안정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제3조에 따른 군수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

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전반에 걸쳐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군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제반규정 준수 등을 통한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전항의 소음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로부터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주민이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하여 그 발생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큰 공사

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하거나 그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고소음·고진동 발생현장의 관리)** 군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서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진동 저감 신고사항의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 할 수 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군수는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협약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항에 따른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보고나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 소음·진동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 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전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 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정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별표 8] <개정 2010.6.30>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확 성 기	소음원			
가. 주거지역, 녹지 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 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 는 학교 · 종합병 원 · 공공도서관		옥 외 설 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 외 설 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

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 간 대 별 대상 지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8일
2. 제 출 자 : 엄윤탁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공포 시행에 따른 명예감독관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목적의 변경(안 제1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 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이던 것을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2조)**

- 위촉직 위원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 부위원장 직위 신설

**라. 위원의 임기 변경(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기 변경

**마. 위원회의 기능 변경(안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5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사. 소위원회의 회의 규정 신설(안 제7조)**

- 소위원회 위원장 소집
- 위원회의 회의(안 제5조) 제2항~제4항 준용

**아. 위원의 해촉사유 변경(안 제1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의2조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 및 상한 삭제 및  
주민감독자에 대한 공사시행 통보 규정 신설(안 제1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조례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공사의 종류 및 상한 삭제하고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공사시행 통보 규정 신설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공포 시행에 따른 명예감독관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개정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며, 협회 단체, 학회에서 추천한 자를 삭제한 것 역시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것임.
  - 안 제3조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한 것은 위원 고착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제약 및 우수 인력의 참여기회 축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의 해촉사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엄윤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의의원 : 엄윤탁 의원, 김성택 의원

##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공포 시행에 따른 명예감독관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목적의 변경(안 제1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 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이던 것을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

###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2조)

- 위촉직 위원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 부위원장 직위 신설

**라. 위원의 임기 변경(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기 변경

**마. 위원회의 기능 변경(안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5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사. 소위원회의 회의 규정 신설(안 제7조)**

- 소위원회 위원장 소집
- 위원회의 회의(안 제5조) 제2항~제4항 준용

**아. 위원의 해촉사유 변경(안 제1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의2조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 및 상한 삭제 및  
주민감독자에 대한 공사시행 통보 규정 신설(안 제1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조례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공사의 종류 및 상한 삭제하고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공사시행 통보 규정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제92조의7, 제106조 제2항·제4항, 제106조의2, 제107조제5항, 제106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가 감독수행을 할 때 지급할 실비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무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4.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이외의 대상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자문 관련자”로 본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자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소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군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본다.

**제8조(심의·자문의 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자문기간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자문 요청사항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의 받은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청을 한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그 심의결과를 해당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자문요청을 한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그 자문결과를 해당 계약 등에 관하여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공사시행통보)** 군수는 영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계약이 체결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고 대상공사의 개요 등을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참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 한 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 및 제5조제4항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중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과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 위원회	수당	90,000	회의가 2시간 이상 소요 시 130,000원
	여비	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공무원 여비규정
	심의 · 자문비	100,000	제5조제4항 · 제7조제2항 · 제10조에 의한 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20,000	예산 범위 내 집행

\* 별표에서의 공무원은 영 제106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위원에 위촉된 자를 말함.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항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제2항 제92조의7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06조제4항 제106조의 2 제107조제5항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2월 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 3. 개정이유

- 다사읍 인구 7만명 이상으로 다사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행자부)에 의거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 총 정원 : 817명  $\Rightarrow$  818명(증1)
  - 집행기관 정원 : 804명  $\Rightarrow$  805명(증1)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3)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조례안은 다사읍 인구가 7만명 이상으로 다사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행자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 지침시달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 최근 발생한 콜레라와 빈발하는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 전담 인력 보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금번 정원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2016년 기준인건비 기준내에서 기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17”를 “818”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804”를 “805”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817818	515	13	9091	96	103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91792	511	13	6869	96	103
3급	1	1				
4급	56	4		1	01	
5급	4039	25	3	3	32	6
6급이하 계	745746	481	10	6465	93	97
연구직 계	2	2				
연 구 관						
연 구 사	2	2				
지도직 계	22			22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0			20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817</u>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804</u>명</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_____</p> <p>_____</p> <p>_____ <u>818</u>명 _____</p> <p>_____.</p> <p>1. _____ : <u>805</u>명</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 별표 3 】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817	515	13	90	96	103	총 계	818	515	13	91	96	103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91	511	13	68	96	103	일반직 계	792	511	13	69	96	103
3급	1	1					3급	1	1				
4급	5	4		1			4급	6	4		1	1	
5급	40	25	3	3	3	6	5급	39	25	3	3	2	6
6급이하계	745	481	10	64	93	97	6급이하계	746	481	10	65	93	97
연구직 계	2	2					연구직 계	2	2				
연구 관							연구 관						
연구 사	2	2					연구 사	2	2				
지도직 계	22			22			지도직 계	22			22		
지 도 관	2			2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0			20			지 도 사	20			20		
별정직 계	1	1					별정직 계	1	1				
5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계	1	1					6급상당 이하계	1	1				

# 소요비용 추계서

## 1. 사업개요

다사읍장 직급 5급에서 4급 조정 및 감염병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일반직 정원 증원

## 2. 비용 발생 요인

가. 증원 : 보건8급 1명

나. 직급조정 : 다사읍장 5급 → 4급 1명

## 3. 관련 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4급(연봉), 5급(30호봉), 8급(10호봉)기준으로 작성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3.8%로 산정

### 나. 추계 결과 : 413,997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413,997천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413,997천원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6. 작성자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계
세 입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지 방 세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의존재원							
세 출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인 건 비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재원 조달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 비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급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2월 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자치행정과)

#### 3. 개정이유

- 대구국가산업단지 사업지구 내 구지면 창리와 현풍면 대리 일부 및 구지면 리간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을 사업 완료 전에 실시하여 향후 야기될 주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면간 경계 변경

- (1) 구지면 창리, 응암리 지역(19필지, 11,625㎡)이 현풍면 대리 지역에 편입
- (2) 현풍면 대리 지역(23필지, 12,420㎡)이 구지면 창리 지역에 편입

##### 나. 리간 경계 변경

- (1) 구지면 응암리, 화산리 지역(194필지, 155,988㎡)이 창리 지역에 편입
- (2) 구지면 창리, 고봉리, 예현리 내리 지역(309필지, 294,063.1㎡)이 응암리 지역에 편입
- (3) 구지면 응암리, 예현리 지역(120필지, 168,723㎡)이 고봉리 지역에 편입
- (4) 구지면 창리 지역(6필지, 477㎡)이 내리 지역에 편입
- (5) 구지면 창리, 수리리 지역(269필지, 261,508㎡)이 화산리 지역에 편입
- (6) 구지면 화산리, 장리 지역(105필지, 132,678㎡)이 수리리 지역에 편입

<행정구역 변경>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필지 수	이동면적(m²)	편입된 지역	비고
구지면 창리	18	11,548	현풍면 대리	면간 경계 변경
구지면 응암리	1	77		
현풍면 대리	23	12,420	구지면 창리	
구지면 응암리	75	61,902	구지면 창리	리간 경계 변경
구지면 화산리	119	94,086		
구지면 창리	131	100,173	구지면 응암리	
구지면 고봉리	126	149,141		
구지면 예현리	6	539		
구지면 내리	46	44,210.1		
구지면 응암리	79	155,717	구지면 고봉리	
구지면 예현리	41	13,006		
구지면 창리	6	477	구지면 내리	
구지면 창리	187	221,288	구지면 화산리	
구지면 수리리	82	40,220		
구지면 화산리	72	97,648	구지면 수리리	
구지면 징리	33	35,030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구국가산업단지 사업지구 내 구지면 창리와 현풍면 대리  
일부 및 구지면 리간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을 사업  
완료 전에 실시하여 향후 야기될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  
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구지면 창리, 응암리 지역(19필지, 11,625㎡)이 현풍면 대리 지  
역에 편입되고, 현풍면 대리 지역(23필지, 12,420㎡)이 구지면  
창리 지역에 편입되며, 구지면 내 리간 경계변경(1,003필지,  
1,013,437㎡)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면간 관할구역 조정) 현풍면, 유가면 및 구지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현풍면 상리와 중리 또는 원교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을 유가면 쌍계리와 봉리 또는 금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
2. 유가면 쌍계리와 상리 또는 금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을 현풍면 상리 또는 중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
3. 현풍면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을 구지면 창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
4. 구지면 창리 또는 응암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을 현풍면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달성군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의 관할구역조정은 별표3과 같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u></p> <p><b>제2조(면간 관할구역 조정) ①</b> 달성군 현풍면·유가면간 편입지역은 아래와 같다.</p> <p>1. 현풍면의 관할구역에 유가면 쌍계리, 상리, 금리 별표1의 지역을 편입한다.</p> <p>2. 유가면의 관할구역에 현풍면 상리, 중리, 원교리 별표1의 지역을 편입한다.</p> <p><b>②</b> 달성군 현풍면·유가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p> <p>1. 현풍면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제2호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p> <p>2. 유가면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제1호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b>제3조(리간 관할구역 조정)</b> ① ~ ③(생략) <u>&lt;신설&gt;</u></p>	<p><u>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u></p> <p><b>제2조(면간 관할구역 조정)</b> 현풍면, 유가면 및 구지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p> <p>1. 현풍면 상리와 중리 또는 원교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을 유가면 쌍계리와 봉리 또는 금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p> <p>2. 유가면 쌍계리와 상리 또는 금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을 현풍면 상리 또는 중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p> <p><u>&lt;삭제&gt;</u></p> <p><u>&lt;삭제&gt;</u></p> <p><u>&lt;삭제&gt;</u></p> <p>3. 현풍면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을 구지면 창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p> <p>4. 구지면 창리 또는 응암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을 현풍면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p> <p><b>제3조(리간 관할구역 조정)</b>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u>달성군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의 관할구역조정은 별표3과 같다.</u></p>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2월 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자치행정과)

### 3. 개정이유

- 옥포면 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증가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리 · 반 조정 : **1개 리 23반 신설**(285리⇒286리, 2,274반⇒2,297반)

읍 면	기 준		개 정		증감		비 고
	행 정 리	반 수	행 정 리	반 수	리	반	
옥 포	강림 1리	10	강림 1리	10	1	23	
			강림 5리	23			

나. 이장 정수 중 1

- 옥포면 : 강림5리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포면 내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개리 23반**을 증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옥포면 **강림5리**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이 장 정 수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계	95	<b>286</b>	<b>286</b>
화원읍	천내리	16	천내1리 천내2리 천내3리 천내4리 천내5리 천내6리 천내7리 천내8리 천내9리 천내10리 천내11리 천내12리 천내13리 천내14리 천내15리 천내16리
	구라리	9	구라1리 구라2리 구라3리 구라4리 구라5리 구라6리 구라7리 구라8리 구라9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화원읍	성산리	6	성산1리 성산2리 성산3리 성산4리 성산5리 성산6리
	설화리	2	설화1리 설화2리
	명곡리	7	명곡1리 명곡2리 명곡3리 명곡4리 명곡5리 명곡6리 명곡7리
	본리리	6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5리 본리6리
화원읍 소계	6	46	46
논공읍	노이리	2	노이1리 노이2리
	금포리	3	금포1리 금포2리 금포3리
	삼리리	2	삼리1리 삼리2리
	위천리	1	위천리
	상리	1	상리
	하리	1	하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남 리	9	남1리 남2리 남3리 남4리 남5리 남6리 남7리 남8리 남9리
	북 리	7	북1리 북2리 북3리 북4리 북5리 북6리 북7리
	본리리	-	
논공읍 소계	9	26	26
다사읍	이천리	1	이천리
	달천리	1	달천리
	박곡리	1	박곡리
	방천리	1	방천리
	서재리	12	서재1리 서재2리 서재3리 서재4리 서재5리 서재6리 서재7리 서재8리 서재9리 서재10리 서재11리 서재12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다사읍	세천리	3	세천1리 세천2리 세천3리
	죽곡리	11	죽곡1리 죽곡2리 죽곡3리 죽곡4리 죽곡5리 죽곡6리 죽곡7리 죽곡8리 죽곡9리 죽곡10리 죽곡11리
	매곡리	18	매곡1리 매곡2리 매곡3리 매곡4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매곡9리 매곡10리 매곡11리 매곡12리 매곡13리 매곡14리 매곡15리 매곡16리 매곡17리 매곡18리
	부곡리	1	부곡리
	문양리	2	문양1리 문양2리
	문산리	1	문산리
	다사읍 소계	52	52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가창면	용계리	7	용계1리 용계2리 용계3리 용계4리 용계5리 용계6리 용계7리
	오 리	2	오1리 오2리
	정대리	2	정대1리 정대2리
	냉천리	2	냉천1리 냉천2리
	행정리	2	행정1리 행정2리
	상원리	2	상원1리 상원2리
	단산리	1	단산리
	대일리	2	대일1리 대일2리
	주 리	2	주1리 주2리
	옥분리	1	옥분리
	삼산리	1	삼산리
	우록리	2	우록1리 우록2리
가창면 소계	12	26	26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하빈면	하산리	2	하산1리 하산2리
	묘리	2	묘1리 묘2리
	기곡리	2	기곡1리 기곡2리
	대평리	2	대평1리 대평2리
	무등리	2	무등1리 무등2리
	현내리	3	현내1리 현내2리 현내3리
	감문리	2	감문1리 감문2리
	동곡리	2	동곡1리 동곡2리
	봉촌리	2	봉촌1리 봉촌2리
하빈면 소계	9	19	19
옥포면	본리리	4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3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옥포면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면 소계	9	21	21
현풍면	상 리	2	상1리 상2리
	중 리	10	중1리 중2리 중3리 중4리 중5리 중6리 중7리 중8리 중9리 중10리
	하 리	1	하 리
	부 리	4	부1리 부2리 부3리 부4리
	성하리	4	성하1리 성하2리 성하3리 성하4리
	원교리	4	원교1리 원교2리 원교3리 원교4리
	자모리	1	자모리
	오산리	2	오산1리 오산2리
	지 리	2	지1리 지2리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현풍면	대 리	3	대1리 대2리 대3리
	신기리	1	신기리
현풍면 소계	11	34	34
유가면	음 리	1	음 리
	양 리	2	양1리 양2리
	용 리	2	용2리 용3리
	봉 리	10	봉1리 봉2리 봉3리 봉6리 봉7리 봉8리 봉10리 봉11리 봉12리 봉13리
	쌍계리	3	쌍계1리 쌍계2리 쌍계3리
	초곡리	1	초곡리
	상 리	1	상 리
	금 리	1	금 리
	유곡리	2	유곡1리 유곡2리
	도의리	3	도의1리 도의2리 도의3리
	가태리	2	가태1리 가태2리
	한정리	3	한정1리 한정2리 한정3리
	본말리	2	본말1리 본말2리
유가면 소계	13	33	33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구지면	창 리	4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응암리	4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고봉리	1	고봉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2	내1리 내2리
	화산리	2	화산1리 화산2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징 리	1	징 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29	29

【별표3】

리 반 의 명 칭 및 관 할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면	강림5리	제1반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 101~1802
		2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 103~1804
		3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 105~1806
		4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301~903
		5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1001~1703
		6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104~1705
		7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3동 101~1304
		8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4동 101~1304
		9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5동 101~1304
		10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6동 101~1304
		11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7동 101~1104
		12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8동 101~1104
		13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9동 101~1204
		14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0동 201~1302
		15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0동 103~1505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면	강림5리	제`16반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1~1502
		17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3~905
		18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03~1805
		19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2동 101~1802
		20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2동 303~1804
		21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1~903
		22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01~1803
		23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4~1805

##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이 장 정 수

읍 면	현 행			개 정 안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법정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
옥포면	본리리	4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본리리	4	본리1리 본리2리 본리3리 본리4리
	신당리	1	신당리	신당리	1	신당리
	교항리	3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교항리	3	교항1리 교항2리 교항3리
	강림리	4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리	5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송촌리	1	송촌리	송촌리	1	송촌리
	간경리	1	간경리	간경리	1	간경리
	기세리	1	기세리	기세리	1	기세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반송리	2	반송1리 반송2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김흥리	3	김흥1리 김흥2리 김흥3리
옥포면 소계	9	20	20	9	21	21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역	읍 면	리	반	구 역
옥포면	◀신설▶			옥포면	강림5리	제1반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 101~1802
						2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 103~1804
						3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1동 105~1806
						4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301~903
						5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1001~1703
						6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2동 104~1705
						7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3동 101~1304
						8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4동 101~1304
						9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5동 101~1304
						10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6동 101~1304
						11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7동 101~1104
						12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8동 101~1104
						13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09동 101~1204
						14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0동 201~1302
						15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0동 103~1505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옥포면	〈신설〉			옥포면	강림5리	제16반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1~1502
						17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3~905
						18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1동 1003~1805
						19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2동 101~1802
						20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2동 303~1804
						21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1~903
						22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01~1803
						23	1133(옥포 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 313동 104~1805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2월 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토지정보과)

#### 3. 개정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6. 9. 1. 시행(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법령개정에 따라 위원회 조례제명을 종전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 나.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의 양성평등 규정 신설(안 제2조의 1항)
- 다.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의 시민단체 참여보장 규정 신설(안 제2조의 5항)
- 라.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4조 10~12호)

#### 5.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에 명시된 위원의 양성평등 규정과 시민단체에서 추천  
한 자 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1회에서  
연10회로 개정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위원  
회의 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므  
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각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2조제3항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로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당연직위원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달성군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제1호 중 “표준지 조사”를 “표준지·표준주택·비주거용표준부동산가격 조사”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1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연1회”를 “연 10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표결권을 가진다.”를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토지평가 및 주택가격업무”를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서기는 그 업무의 담당직원이 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위원회 구성)</b></p> <p>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필요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p> <p>④ (생략)</p> <p>⑤ 당연직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b>제1조(목적)</b>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p> <p><b>제2조(위원회 구성)</b></p> <p>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 ----- ----- . 다만,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당연직위원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달성군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현행	개정안
<p><b>제4조(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p> <p>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u>표준지조사</u>, 평가에 관한 사항</p> <p>2.~ 9. (생략)</p> <p>&lt;신설&gt;</p>	<p><b>제4조(기능)</b> ----- -----.</p> <p>1. ----- <u>표준지·표준주택·비주거용표준부동산가격조사</u>, 평가에 관한 사항</p> <p>2.~ 9. (현행과 같음)</p> <p>10.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1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p> <p>1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p>
<p><b>제5조(회의)</b></p> <p>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u>연1회</u>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p><b>제5조(회의)</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연 10회</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b>제6조(의사)</b></p> <p>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표결권</u>을 가진다.</p>	<p><b>제6조(의사)</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표결권</u>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p>
<p><b>제7조(간사와 서기)</b></p> <p>① (생략)</p> <p>② 간사는 <u>토지평가 및 주택가격업무</u> 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lt;신설&gt;</p>	<p><b>제7조(간사와 서기)</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부동산 가격공시업무</u> -----, 서기는 그 업무의 담당직원이 된다.</p> <p>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 2016. 9. 1.)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 9. 1.)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 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

#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2월 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도시과)

### 3. 제안이유

-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2장 제2절 제3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2016년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된 시설
-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우선해제시설)
- 2014년 군의회 제232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 201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035개소 중 미집행 시설은 856개소
- 금회 의회보고 대상인 2016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은 263개소, 우선해제시설은 46개소, 2014년 보고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558개소

(2016.12.31.기준)

시설 구분	시설 세분	전체		집행		미집행시설								집행율 (%)
						미집행전체		10년미만		10년도래		10년이상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합계		3,036	13,215,626	2,180	9,595,572	856	3,620,054	61	486,040	263	407,013	795	3,134,014	72.6
도로	소계	2,405	5,433,172	1,639	4,166,659	766	1,266,513	52	58,130	200	353,495	714	1,208,383	76.7
	중로	295	1,980,546	271	1,814,161	24	166,385	3	16,495	-	-	21	149,890	91.6
	소로	2,110	3,452,626	1,368	2,352,498	742	1,100,128	49	41,635	200	353,495	693	1,058,493	68.1
주차장	노외주차장	94	152,656	63	133,636	31	19,020	3	850	27	15,870	28	18,170	87.5
공원	소계	94	220,236	58	130,404	36	89,832	3	47,182	27	27,740	33	42,650	59.2
	어린이공원	70	148,928	55	119,948	15	28,980	-	-	9	14,070	15	28,980	80.5
	소공원	22	24,488	3	10,456	19	14,032	1	362	18	13,670	18	13,670	42.7
	문화공원	2	46,820	-	-	2	46,820	2	46,820	-	-	-	-	0.0
녹지	소계	189	3,253,062	168	1,342,071	21	1,910,991	2	46,783	9	9,908	19	1,864,208	41.3
	완충녹지	130	3,014,118	109	1,103,127	21	1,910,991	2	46,783	9	9,908	19	1,864,208	36.6
	경관녹지	49	144,424	49	144,424	-	-	-	-	-	-	-	-	100.0
	연결녹지	10	94,520	10	94,520	-	-	-	-	-	-	-	-	100.0
연구시설	연구시설	3	1,397,545	2	1,064,450	1	333,095	1	333,095	-	-	-	-	76.2
학교	초등학교	44	602,936	43	602,333	1	603	-	-	-	-	1	603	99.9
기타시설	기타시설	207	2,156,019	207	2,156,019	-	-	-	-	-	-	-	-	100.0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6.12.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795	3,134,014	
	도 로	합 계	714	1,208,383	
		중 로	21	149,890	
		소 로	693	1,058,493	
	주차장	노외주차장	28	18,170	
	공 원	합 계	33	42,650	
		어린이공원	15	28,980	
		소공원	18	13,670	
	녹 지	완충녹지	19	1,864,208	
	학 교	초등학교	1	603	

### ○ 2016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6.12.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2016년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	총 계		263	407,013	'06. 10. 30.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 로	소 로	200	353,495	
	주차장	노외주차장	27	15,870	
	공 원	합 계	27	27,740	
		어린이공원	9	14,070	
		소공원	18	13,670	
	녹 지	완충녹지	9	9,908	

### ○ 우선해제시설

(2016.12.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우선해제시설 (폐지)	총 계		46	29,557	
	도 로	합 계	43	20,634	
		중 로	-	-	
		소 로	43	20,634	
	녹 지	완충녹지	2	8,320	
	학 교	초등학교	1	603	

※ 도로, 녹지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해제 예정

※ 초등학교 1개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해제 추진 중

- 2014년 보고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2016.12.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2014년 보고한 시설 중 2년이 지난 시설	총 계		558	2,853,847	
	도 로	합 계	510	906,812	
		중 로	20	141,979	
		소 로	490	764,833	
	주차장	노외주차장	1	2,300	
	공 원	합 계	36	89,832	
		어린이공원	6	14,910	
	녹 지	완충녹지	10	1,854,300	
	학 교	초등학교	1	603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55개소(군비 854, 국·시비 1)

- 군 비

(단위 : 천㎡, 억원)

구 분	합 계			2017~2019(1단계)			2020 이후(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854	3,286	7,842	111	235	663	743	3,051	7,179
도로	766	1,267	5,391	91	191	532	675	1,075	4,858
주차장	31	19	72	1	2	19	30	17	53
공원	36	90	195	19	42	112	17	48	83
녹지	21	1,911	2,184	0	0	0	21	1,911	2,184

- 국비 및 시비

(단위 : 천㎡, 억원)

구 분	합 계			2017~2019(1단계)			2020 이후(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연구시설	1	333	3,763	1	92	1,041	1	241	2,722

## 5.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 II. 검토의견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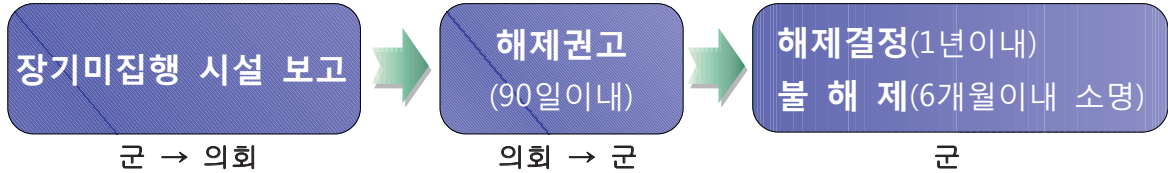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6년도 기준 10년이 경과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 군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해제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나, 해제가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제 권고일 6개월 이내에 해제 불가소명을 하여야 함.
- 주요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도로 714개소, 주차장 28개소, 공원 33개소, 녹지 19개소, 학교 1개소로 총 795개소 3,134천㎡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90%가 도로시설로,
-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정으로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난개발 등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 상당한 문제 발생이 예상됨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 및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1

## 의회보고 절차 및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



### ○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도시개발계획, 환경 등)
-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 참고 2

## 관계법령 등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4항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



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 제3장 해제 기준

####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순위

-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설치의무자 포함)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한다.
-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긴 시설은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
- (3)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한다.